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관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정부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화 된 국가인 북한은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절대적 독재 권력 하에 놓여있다.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외딴 지역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범인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들은 상당수 수감자가 고문, 기아, 질병, 유기, 또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북한 관리들은 감옥에서의 출산을 금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수감자 수용소를 중심으로 강제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수년간, 1990년대 초까지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대한 생체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일부 탈북자의 주장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북한 당국은 언론·종교·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했다.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 송환은 미국이 특별히 우려하는 사안이었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송환 즉시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일부는 처형되었다. 또한 북한은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곳곳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중국으로 매매된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의 제정 이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2005년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들도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4월에 부시 대통령은 북한 탈북자들과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소녀의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2006년 한 해,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운동에 계속 재정 지원을 했다. 3월에 몇몇 북한 탈북자가 최초로 유럽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으며, 7월에는 로마에서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계속했다.

다수의 미국 정부 관리는 양자간·다자간 포럼을 통해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다른 국가들도 북한과의 양자 관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중요 사안으로 다루도록 촉구했다. 여전히 인권은 미국 정부의 포괄적 대북 어젠다 중 일부이며, 미국 관리들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 북한의 국제 사회 참여와 미국과의 외교 정상화에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해왔다. 4 월의 북한 관련 의회 공청회에서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 정부의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를 비난했다.

11 월에 미국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한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12 월 유엔 총회가 동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두 번째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12 월 채택된 결의문은 북한은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 조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북한 정부는 유엔 특사를 초청하고 인권 단체에 자유로운 북한 접근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본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했으며 북한인권법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취약 집단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힘썼다. 미국은 9 명의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했으며, 2006 년 이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도록 했다. 미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 함께 북한 난민의 보호와 지원을 촉구하고 이들의 영구적 재정착을 원활화 하도록 협력했다. 고위급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에 1951 년 난민 협약과 1967 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1) 본 조약의 보호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강제 송환)하지 말 것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의 임무 수행 시 협조할 것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북한 망명 신청자의 본국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가 이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협력 하에 중국 내 북한 난민 문제를 다루었으며, 동일한 우려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과 접근법을 조율했다. 4 월에 백악관은 중국측이 중국 내 한국 학교로 피신한 북한 망명 신청자 한 명을 본국으로 송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정부에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4 월 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동안 이 문제를 제기했다.

2006 년, 라이스 국무부 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해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극심하게 침해하는 “특별 우려 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